

민주주의(한국)

정 용 욱 (서울대 국사학과)

목 차

1.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
2. 해방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
3.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특징

1.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

한반도에서 민주주의 정체를 공식 선언하며 등장한 최초의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곧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등장했다. 양자는 비록 분단정부의 형태로 출발했지만 모두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 정체가 공식 출현한 것은 1948년이지만 한국인들은 그 이전부터 민주주의 이념, 제도의 도입과 그 실현을 위해 장기간 노력을 기울였다.

서구에서 근대 민주주의 이념, 제도의 형성과 발전이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과 연결된 정치, 사회 발전에 기초한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식민지, 분단, 독재로 이어지는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항상 달성해야 할 이념적, 제도적 목표로 존재했다. 한국 근대의 출발점에서 이러한 목표의 제시는 선진적 사상가의 몫이었다. 19세기 후반 선진적 사상가와 관료로 구성된 개화파가 출현하여 서구의 근대적인 사상, 문물과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근대화하려는 개화운동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 사상, 제도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 이념, 제도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였지만 그 사상적 원리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저서에도 나타난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원목」(原牧)과 「탕론」(湯論)에서 ‘본래 통치 권력은 민인(民

人)의 밑으로부터의 추대에 의해 상향적으로 이정(里正) → 당정(黨正) → 주장(州長) → 방백(方伯) → 황왕(皇王)이 생겨났다'고 설파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황왕(皇王)의 근본은 이정(里正)에 있다'고 언급했고, 심지어 '잡아서 끌어내린 자도 중인(衆人)이며, 받드는 자도 중인'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렇게 다산은 민중으로부터 최상위의 통치자가 추대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통치자가 아래의 민인을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민중의 참정권과 사회계약설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주장은 서구 민주주의 사상의 수용 기반이 이미 한국 전통 사회의 태내로부터 마련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개화운동은 위로부터 부르주아적 개혁과 서구의 근대적 문물,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봉건제 극복을 시도했다. 개화운동은 근대적 문물과 제도의 도입, 민권(民權) 사상의 보급과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개화운동은 청국(淸國), 일본, 러시아 등 외세의 빈번한 개입과 당면한 식민지화 위기에 대응하여 민권보다는 군권(君權), 국권(國權)을 매개로 문명개화(文明開化), 자강독립(自強獨立)을 위한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갑신정변, 갑오개혁 주체들의 개명군주(開明君主)를 통한 군권변법(君權變法) 추구, 독립협회의 입헌군주제 설립 노력,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의 국권회복운동은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마는데, 어느 것이나 근대적 시민계급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 또 제국주의 침략 하에서 전개된 위로부터 부르주아 개혁운동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한계를 보여준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근대 민주주의 제도, 이념의 도입 주체들과 그 실현 주체들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다. 갑신정변의 예와 같이 개명관료들의 정변으로 출발한 개화운동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을 거치면서 점차 대중적 기반을 넓히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개화운동은 계몽운동의 구도를 탈각하지 못한 채 민중들과 결합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근대 민주주의 실현의 과제와 반침략 과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개화운동은 맹목적 근대주의로 흘러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일제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고, 이 시기에 반제, 반봉건 과제 해결에 더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봉건제 해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동학농민전쟁과 같이 광범한 농민층의 반제, 반봉건운동이었다. 농민군이 뚜렷하게 근대적 이념에 입각해 농민전쟁을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들이 내건 폐정개혁안이나 집강소 설치에 드러나듯이 봉건적 신분제의 폐지와 농민적 자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등 농민전쟁은 일정하게 근대적 지향성을 드러냈다.

1919년의 3.1운동은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한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대중투쟁이었다. 3.1운동 역시 광범한 계급계층으로 이루어진 민중이 민주주의 실현의 적극적 주체로 나섰다. 민족대표가 3.1운동을 촉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스스로 일제 경찰에 투항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지도자의 공백

을 학생, 종교계 중간 지도자, 지방 유지들이 맡았고, 이후 운동을 농촌으로, 또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민중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운동이 민중적 차원으로 확산되자 투쟁 양상도 한층 격화하였다. 3.1운동은 무단통치라는 일제의 가혹한 민족 억압과 식민지 착취가 한국인들의 민주적 권리를 뿌리째 부정하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런 측면에서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한 전민족적 항거이자 동시에 민주화 투쟁이기도 했다. 3.1운동은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원리인 주권재민과 민주공화정이 전사회적 차원에서 천명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3.1운동 전후 국내, 국외 각지에 수립된 임시정부들이 발표한 강령, 또는 그 시기에 발표된 각종 독립선언서는 모두가 국민주권의 공화주의 이념을 표방했다.

3.1운동은 일제 식민지기 민족해방운동의 분수령이었다.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은 주도 이념과 주도 세력의 측면에서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으로 분화하여 대중적 기반을 확대했다. 개항기에 선각적 지식인들이 근대 민주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것과 비슷하게 사회주의 사조 역시 3.1운동을 전후한 시점에서 선각적 지식인들이 사상운동의 형태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였다.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은 당연히 일제로부터 해방을 추구했지만 그 목표가 단지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독립 이후 새로 건설할 국가에 대한 전망도 포함되었다.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사상과 노선, 그리고 지지기반의 차이가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전체를 놓고 보면 각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건국구상은 점차 수렴되는 모습을 보였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좌우 협동전선의 형성이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적 목표가 되었고, 양진영의 노력은 국내에서는 신간회 운동, 국외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부분적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 양진영의 민족통일전선 형성 노력은 이후 부침을 거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양진영은 공동활동의 경험을 쌓고 연대를 이루었으며, 양진영의 운동 이념과 목표도 일정한 수렴을 거치게 된다. 1920년대 이후 민족해방운동에서 주도적인 흐름이 된 사회주의운동은 최대강령으로서 반(反)자본주의 과제를 제기했으나 당면목표는 일제 통치의 완전한 타도와 조선의 완전한 독립이었고, 1930년대 후반이래 최소강령으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 곧 일반민주주의의 과제를 제기했다. 또 민족운동 진영인 임정이 1941년에 제시한 건국강령은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 건설, 경제적으로 토지와 중요 생산기관의 국유화였다. 대체로 1930년대 후반부터 민주공화제와 균등경제의 실현이라는 목표는 국내외 민족해방운동 진영에서 좌, 우를 불문하고 대세를 이루었다.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은 독립국가의 수립만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 아래 빼앗긴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회복을 지향했다. 그 때 민주화란 정치적 민주주의의 쟁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까

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통해 새삼 확인되었다. 그런 면에서 일제 식민지기는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목표와 지향을 숙성시킨 시기였다. 또 1920년대까지 민족해방운동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의 성격을 가졌다면 1930년대 이후 민족해방운동은 그러한 성격을 기본적으로 간직하면서 전세계적 차원에서 반파시즘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다.

2. 해방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해방 직후 한국 사회는 일제 식민지기에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적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열기로 들끓었다. 식민지 상태에서 갓 해방된 나라답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새로운 국민국가 수립을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했다. 또 독립국가 수립 이전에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당면 과제도 해결해야 했다. 즉, 해방 직후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는 사상·이념의 차원보다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사회·경제 개혁과 식민 유제 청산의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며, 각 정치세력들은 다양한 국가건설론과 개혁론을 제기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미·소의 분할점령과 냉전의 도래는 국가건설과 개혁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 내부에 격렬한 대립을 불러일으켰고, 남한에서는 당면한 일제 잔재의 청산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중앙의 건국준비위원회와 지방의 인민위원회 등 한국인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정치 기구를 부정함으로써 민중 자치의 실현을 저지했다. 미군은 현상 유지를 앞세워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를 온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협력했던 한국인 관료, 경찰을 점령통치 기구에 대거 충원했다. 미군은 민족반역자 처단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제에 부역한 친일 지주, 기업가, 관료 등 부일협력배를 온존시키고 이를 비호했다. 미군은 식민유제의 물적 청산을 위한 토지개혁과 귀속재산 처리 요구에도 불응했다.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비호 아래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조선에 관한 결정」이 국내에 전달되자 소련군은 반탁을 주장하는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북한 정치는 다양성을 상실해갔다. 소련군 점령 하에서 임시인민위원회 등 한국인 정치기구가 조직되었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등이 실행됨으로써 일제 식민지배의 물적 토대를 해체했고, 부일협력배를 처단함으로써 일제 식민통치를 인적으로 청산했다.

분할점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논의는 독자적인 국가건설론과 개혁론으로부터 미·소의 체제 이념에 순응하거나 그것을 선전하는 차원으로 전락했다. 1947년 여름이후 미소공동위원회가 정체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이

관했고, 소련은 양군 동시철군 후 한국인에 의한 자주적 해결을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1948년에 들어서 김구, 김규식 등 남측 지도자와 김일성, 김두봉 등 북측 지도자들, 그리고 남과 북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회합하여 한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UN결의에 따른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남에서 민주주의 논의는 보통선거 실시 등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차원으로 왜소화되었다. 이미 미군 점령 하에서 '10월 항쟁',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 민중 봉기가 끊이지 않았고, 정치·사회적으로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가운데 민중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가 와해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국가보안법 제정, 국민보도연맹 조직, 민보단 설치 등 강압적인 통제체제 구축에 전념했다. 이어서 벌어진 6.25전쟁은 그러한 구조를 고착시켰고, 휴전 이후 이승만의 극우독재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북한 사회는 전후 복구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제도 확립과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수립의 길로 들어섰고, 민주주의 논의는 사회주의적 개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적 명분론으로 변질되었다.

휴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이승만 독재정권의 억압통치와 백색테러, 용공조작, 부정선거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이 사실상 형해화 되거나 사문화 되었다. 이어지는 독재정권 하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이해는 일반 민중의 자치와 지배, 개인의 자유와 인권, 기본권 보장 등 민주주의의 고유한 원리가 부정되고, 기껏해야 경쟁에 의한 대표 선출이나 정치지도자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여부를 따지는 최소주의적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1960년의 4.19민주화운동이 학생들의 부정선거 반대운동으로 시작해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고, 결국 이승만의 하야를 이끌어냈지만 이승만 정권의 종식 이전에 학생층의 요구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원리의 보장과 준수 차원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은 전후 민주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몰락 후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자 거창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요구, 교원 노조 설립 운동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구들이 조직적으로 분출했으며, 한미행정협정 개정 운동과 통일운동의 확산 등 짧은 시간 안에 분단체제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정치적 민주화 요구와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 회복으로부터 출발해서 투쟁이 발전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아가 분단구조의 시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패턴은 광주민주항쟁 이후 다시 나타난다.

5.16군사쿠데타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고 권력을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4.19 이후 고양된 민주적 개혁 열기와 분단체제 극복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그 반민주적 성격이 한층 두드러진다. 5.16쿠데타는 이후 박정희 장기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6.3민주화운동이래 수시로 발동된 위수령에서부터 1967년 6.8부정선거, 삼선개헌, 유신헌법, 긴급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통치 행태에 나타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반민주 폭압정치를 강화했다. 특히

1972년 10월에 선포된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의 원리 자체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반민주 악법이었다. 이후 수립된 유신체제 하에서 발령된 각종 긴급조치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탄압했다. 유신체제는 온 사회를 통제된 병영국가로 만들었고, 온 국민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 하에서도 학생운동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운동연합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의 결성을 시도했고, 교회나 학내의 비공개 이념 서클을 중심으로 노동야학 활동을 벌이며 민중들과 연대를 강화했다. 또 수많은 경찰들과 정보요원이 대학에 상주하는 상황에서도 학생운동은 민주 회복과 학원자유화를 요구하며 학내외에서 선도적인 투쟁을 벌였고, 운동의 조직화와 이념적 심화, 민중과의 연대 활동을 강화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것은 학생운동 세력과 이른바 '재야'로 불리는 야당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교수, 문인, 법조인, 언론인, 여성계 인사들이었다. 재야운동은 1973년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1976년 '3.1민주구국선언문'과 1977년 '민주구국헌장' 선포 등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상징적인 구심 역할을 했고, 박정희 정권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1979년 3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국민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에 대항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벌인 저항운동이었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수호,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것을 주도한 것은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이었지만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 1979년의 YH사건과 부마항쟁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듯이 1970년대에 이른바 민중 세력이 조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전태일 사건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노동운동과 노학연대의 시작을 암시하기에 충분했고, 1970년대를 통해 경공업 분야에서 노조설립 운동과 노조민주화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이 시기에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후원을 받아 농민운동과 도시빈민운동의 조직화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 '민중'이라는 용어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정치적·이념적 구심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묶는 계급·계층 연합의 의미로 정착하였고, 한국사학, 문학, 신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것의 개념화를 위한 다양한 논쟁이 뒤따랐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측근에 의해 피살됨으로써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1970년대 내내 계속된 반독재 민주화투쟁이 유신체제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민주화운동 세력과 유신 세력 어느 쪽도 사태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군인들이 12월 12일 기습적으로 쿠데타를 감행하여 권력을 장악했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체제 재편에 들어갔다. '신군부 집단'은 '서울의 봄' 투쟁 등 민주화운동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으나 광주민주

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에 드러나듯이 무자비한 탄압을 통해 집권했고, 불법연행, 고문, 투옥, 각종 의문사 등 공권력의 이름으로는 자행하기 힘든 폭력을 통치수단으로 삼아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갔다.

신군부의 1980년 5.17계엄확대 조치에 반대하는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항쟁으로 발전했다. 계엄군에 대항한 시민군의 무장투쟁은 광주 시민들의 지지 속에 1주일간 계속되었으나 계엄군의 진압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남긴 채 진압되었다. 광주항쟁은 신군부의 권력장악 기도에 반대하는 민중항쟁이자 민주화운동이었고, 광주시민들의 열혈에 걸친 투쟁은 신군부의 폭력성과 반민주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광주항쟁을 고비로 광주항쟁 유혈진압에 대한 미국의 책임문제가 제기되고 미국의 군사독재정권 지원을 반대하는 반미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학생들의 전방입소 거부나 반전반핵 구호에 나타나듯이 한반도 평화구조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통치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은 오히려 활성화되는 추세였다. 학생운동의 조직화와 급진화가 두드러졌고, 대학생 수의 증가로 그 대중성도 강화되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학내외 시위, 점거 등 선도적 투쟁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에게 직접 정치적 타격을 주었고, 농촌활동, 공장활동, 철거민 지원투쟁 등 민중과 연대활동을 강화했다. 재야운동은 1980년대 들어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주문화운동협의회가 결성되는 등 부문별로 조직화가 진행되었고, 지역별로도 조직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라는 전국적 조직을 결성했다. 1985년 2월 국회의원 선거는 일반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재야세력은 야당과 연대하여 대통령직선제 개헌운동을 전개했다. 1986년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집회에 수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고, 투쟁 규모의 확대와 지속성, 투쟁 열기라는 측면에서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대중투쟁의 위력은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유감 없이 발휘되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권 타도와 직선제 개헌을 외치는 학생,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연달아 일어났다. 전두환 정권은 '4.13호헌조치'로 이에 맞섰지만 오히려 불에 기름에 붓는 격이었고, 사회 각계각층의 호헌반대 성명이 줄을 잇는 가운데 야당과 재야는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했다. 6월 내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국본이 주도하는 국민대회와 평화대행진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 이어졌고,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 학생 시위대는 곳곳에서 경찰을 무장해제 시켰다. 전두환 정권은 마침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했고, '6.29선언'을 발표하여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였다.

직선제 개헌 쟁취라는 정치적 승리는 민중의 권리의식을 크게 고취시켰다. 7.8.9월

석 달 동안 전국적으로 3,300여건의 노동쟁의가 일어났고, 참여 인원은 122만 여명으로 10인 이상 사업체 총노동자 333만 명의 37%였다.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75.5%에서 쟁의나 시위가 일어났다. 광주민주항쟁 이후 많은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1980년대 전반에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노조 설립과 노조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끊이지 않더니 1985년에는 구로동맹파업과 같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대투쟁을 성사시켰다.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은 그 이전 시기 노동운동의 조직적 성장으로 가능했고, 전국적 규모의 파업·시위 발생, 운동의 주된 참가자가 여성노동자나 중소기업 노동자에서 대기업 남성노동자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과 다른 특징을 가졌다.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야당과 재야의 분열로 6월항쟁의 성과가 바로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도하는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1990년 1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주도한 ‘삼당합당’ 사건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지역주의적 정치구조를 고착시켰고, 그간 축적해온 민주화운동 역량의 분열과 해체를 초래했다. 그러나 1992년 ‘문민정부’의 등장은 이제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은 이후 민주화운동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았다. 이제 민주화운동은 학생과 지식인 등 중간층 위주의 비조직적 저항운동에서 민중 주도의 조직적 투쟁으로 바뀌었고, 운동의 쟁점도 반독재 민주화에서 계층 간 사회경제적 갈등과 모순의 해결 등 보다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적 사회운동을 지향하게 되었다. 6월민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노동조합운동협의회, 전국농민운동연합,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등 부문별 전국 조직을 결성하면서 조직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1987년 이후 통일운동이 대중화되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었고, 사회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 시기 사회운동의 큰 특징이다.

1990년대 전반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정부의 개방화 정책과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자본 공세가 강화되는 등 국내외 정세 변화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이 크게 약화되었고, 대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성장에 나타나듯이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또 여성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소수자운동 등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과 시민운동이 등장했고, 진보정당운동도 등장했다. 대중운동, 시민운동은 기존의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띤 체제변혁적 운동을 지양하고, 각 분야별로 시민적 권리의식의 확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정착과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대중운동, 시민운동은 정치적 민주화를 비롯해 경제적·사회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97년의 금융위기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되었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등 노동자의 상태도 극히 불안정해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적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의 필요성은 점차 강화되었으나 노동조합운동의 개별화 등 사회운동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적 참여 속에 전개된 민주화운동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이룬 성취를 다지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전히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적 정당운영에 의존하는 정당정치의 미숙성을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문제,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립에는 성공했지만 이를 사회적·경제적 민주화의 달성으로 연결시켜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제, 사회복지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수립·확충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까지의 경제성장을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개선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이를 제도화하고 구체적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동북아시아의 패권구조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 등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3.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특징

개항기 이래 현재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또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 근대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 문물을 도입·수용하려고 노력했던 개항기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제 식민지기와 해방 직후 시기를 거치고, 또 반독재 민주화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4.19민주화운동부터 정치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확보한 1987년의 6월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다시 정치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그 외연을 확장하여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발전의 장기성과 지속성, 강인성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첫 번째 특성이라 할 만하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는 장기간의 투쟁을 거쳐서, 특히 대중적 투쟁에 크게 의지하여 발전했다. 3.1운동, 4.19민주화운동, 광주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일어나는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대중투쟁의 역동성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지탱한 커다란 동력이었다. 일제 식민지기와 해방직후 시기에 전위정당부터 전선조직, 대중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동·정치 조직이 있었고,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근대적 정당과 사회단체 이외에 종교단체는 물론 ‘재야’로 불리던 명망가와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의 연합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적 실험이 있었지만 결정적 국면에서 해당 시기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해결한 것은 언제나 대중투쟁이었고, 대중투쟁이 정당과 사회단체

의 조직적 투쟁을 압도했다. 대중투쟁의 역동성은 한국 민주주의의 고유한 특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계를 노정하기도 한다. 즉, 대중투쟁이 이룩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대중적 명망성을 확보한 지도인물이나 대안세력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투쟁의 성과를 제도화하는데 실패했다.

셋째, 역사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실현 주체는 부르주아 계급이나 노동자계급의 어느 단일한 계급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계층의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일제 식민지기 전시기에 걸쳐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적 목표가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제휴와 연대에 기초한 좌우협동전선의 수립이었고, 해방 직후의 다양한 국가건설론과 개혁론이 '인민' 개념에 기초했던 것이나, 1970년대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이론적.실천적 구심 역할을 한 것이 '민중' 개념이었다는 데 잘 나타난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각 계급.계층이 식민지와 분단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정치조직을 미처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청년이 한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각 계급.계층이 맡은 역할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학생계층이 해방 이전이나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본격화한 196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이 일정한 성취를 거둔 1990년대 전반까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탄압이 극심한 조건에서 청년, 학생이 선진 사상.이념의 수용과 투쟁의 조직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또 학생사회가 그것에 필요한 조직 활동을 벌이기에 적당한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제 식민지기에 전개된 좌우협동전선론이나 사회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 내부의 다양한 노선투쟁, 또 해방 직후의 국가건설과 사회개혁을 둘러싼 정파들 사이의 논쟁, 1970년대 이후의 민중론, 1980년대 반제반봉건민족해방혁명론 대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론의 대립, 1990년대 이후의 시민운동론과 진보정당건설론 등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시기별로 다양한 실천 이론이 전개되었고,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이론적 이해를 고양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논쟁들은 해당 사회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해명, 운동의 전략.전술을 둘러싸고 전개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달성해야 할 민주주의의 성격은 물론 그 실현의 주체와 방식, 경로 등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함께 들어 있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사상.이념 수용, 전파와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다른 한 가지 특색은 실천가와 지식인의 사상.이론적 대안과 대중적 인식 사이의 낙차 문제이다. 일제의 패망이라는 조건에 대응해서 해방직후 대중의 폭발적인 정치적 진출이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 농민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도시화의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문맹을 또한 80%를 상회했던 사회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낙후된 사회적 조건에서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를 도입.수용해야 했던 사정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사회적 조건의 낙후성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더불어 일제가 한국인들 사이에 예측성과 패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생긴 사상.의식 측면의

식민지성도 고려해야 한다. 해방 이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수립된 극도의 반공주의하의 독재가 학살의 무덤 위에서 겁먹은 대중들을 향해 자행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황이 한국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유지시키며 대중들의 의식을 속박하는 역할을 했다.

다섯째,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세계사적 조건과 국내적 조건의 특이성이다. 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탈냉전 이후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상태로 남아 있다. 또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고, 시민.민중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 영역에서 이러한 시민.민중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낙후성을 보이고 있고, 보수일변도 정치권은 분단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이한 조건에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 속의 민주주의, 일상적 민주화는 여전히 도달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이 한국 민주주의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 식민성과 분단이라는 세계사적 조건과 그것이 국내에 관철되며 조성한 체제상의 문제와 역사적 조건의 극복이야말로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새로이 규정하게 될 것이다. <끝>

참고문헌

- 김삼웅 편, 『민족 민주 민중선언』 한국학술정보, 200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09
-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비, 1998
-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2006
- 조희연 편,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1~3, 나눔의집, 2001, 2003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 한국신학연구소 편, 『한국민중론』, 韓國神學研究所, 1984.
- 강정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 김동춘, 「1960, 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 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 김동춘,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창간호, 2002
- 박명림, 「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민주주의 ‘제도’와 권위주의 ‘실천’의 역사적 조건」,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 박명림, 「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7-1, 2003
- 박명림,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24-2, 2008
- 손호철,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9-4, 2003
- 안병욱,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역사와현실』 77, 2010. 9
- 이상록,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의 담론」 『역사와현실』 77, 2010. 9
- 이준식, 「민족해방운동의 유산과 민주화운동」 『역사와현실』 77, 2010. 9
- 한홍구, 「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는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창간호, 2002